

불안한 한빛원전 폐로 촉구 등 탈핵 목소리 높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주년...광주·전남 탈핵 움직임 주목

환경단체 "일본 지금도 방사능 배출...더 이상 핵발전 용납해선 안돼" 영광군, 한빛 1·2호기 폐쇄 앞두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책 마련 고심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년 3월 11일) 10주기를 계기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탈핵 촉구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빛원전의 폐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개의 원자로 가운데 3기의 가동 중단 로드맵이 나온다. 한빛원전이 위치한 영광군도 폐로로 인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탈핵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빛원전 1·3·4호기 폐쇄...적극적인 탈핵 정책"=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과 '한빛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등 탈핵단체는 11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을 교훈 삼아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이 지난 현재 일본의 상황은 더 이상 핵 발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 3호기에 있는 핵연료와 핵연료폐기물에 대한 수습을 10년만에 끝냈을 뿐 나머지 발전소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서 "심각하게 누아내린 격납용기의 처리는 높은 방사능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 후쿠시마현 산림지대에서 채취한 삼나무잎 시료에는 체내로 들어오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스트론튬-90'이 검출되는 등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빛원전의 불안함도 꼬집었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에 수백개의 구멍이 있는 사실조차 오랫동안 파악하지 못했고 한빛 5호기 정비 과정에서 불량 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면, 무자격자가 정비를 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안

전 관리·감독으로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6개의 원자로 중 1·4·5·6호기는 고장·정비 등으로 가동이 멈춰진 상태다.

이들은 또 "현 정부는 탈핵 정책을 표방하고도 신고리 4호기 가동이 시작됐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도 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4년 뒤면 한빛원전 1호기 폐쇄=한빛원전 1·2호기가 폐로되면 원전세가 32%(161억여원) 줄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폐로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영광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최종 보고회를 통해 수소에너지 중심의 미래 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수소 산업 특구를 만들어 지역의 중추적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나는 게 영광군의 구상이다.

영광군은 이같은 최종 보고회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10주년을 기억하는 행사를 열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폐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오토바이 난폭운전 5월까지 집중 단속

무질서하고 난폭한 오토바이 운전 문화가 광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광주일보 2월 25일 7면)과 관련, 광주 경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2년 간 오토바이 사망자가 급증한데다, 젊은층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특히 '집콕'의 영향으로 배달 오토바이 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과속·신호위반, 끼어들기·역주행 등 위반 행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62명) 중 27.4%(17명)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 전년도 오토바이 사망자(4명)가 전체 사망자(49명)의 8.1%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17명 중 70.6%(12명)이 10~20대였고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숨진 경우도 17명 중 10명이나 꽤 절반(58.8%)을 넘었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들어 5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임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에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도 미작용·인도 주행·난폭 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을 유발하는 소음(머플러) 임의 교체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거리두기 위반 과태료 부과율 전국 상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에 대한 광주·전남의 과태료 부과율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각 시도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 있다'는 신고가 505건, '밤 9시 이후 영업 중'이라는 신고가 46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 276건 가운데 35건(12.7%), 전남에서는 229건 중 24건(10.5%)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한 광주와 전남의 과태료 부과율은 충남(50.4%)과 경남(23.3%)에 이어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은 광주 32.6%(신고접수 319건·부과 104건), 전남 16.3%(신고접수 141건·부과 23건)으로 강원도(56.8%)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차 취업사기 연루 또 다른 목사·장로 추가 기소

수천만원씩 챙긴 2명 첫 공판
광주경찰 미흡한 수사 비판

기아차 취업 사기에 연루된 종교인들이 추가로 붙잡혔다.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A 목사 외에 또 다른 목사들과 장로 등에 대한 기아차 취업사기 범행을 추가로 파악,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재산사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이미 구속된 A 목사 뿐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수 차례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온 만큼 검찰 수사로 다른 목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피해자들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광주경찰청을 찾아 다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와 C 장로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장은 이미 구속돼 재판이 진행중인 A 목사

사건과 같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난 3일 새롭게 기소된 B 목사와 C 장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키로 했다.

B 목사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22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8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 장로도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8명을 모집한 대가 명목으로 4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목사에 대해서도 기아차 취업이 불가능한 계 예견된 뒤에 374명을 추가로 모집해 30대 남성이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73억15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기아차 취업 사기 피해자들 115명 명의로 추가 고소·고발이 이뤄진 데 따라 관련 수사를 통해 B 목사와 C 장로의 혐의를 확인,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요구했던 'A 목사 외에 다른 목사 등 종교인들이 연루됐는데, 이들 범행도 살펴봐달라'는 내용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셈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A 목사와 함께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회 교인들 수백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근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中
- ▶ 매매 - 20억(토지 17억 + 공사비 3억)

문의.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